**독일의 전자 정부**

행정학과

21180762

윤나경

**1. 독일의 일반 행정 체제와 관할**

**1) 독일의 복잡한 행정 개요**

독일 연방 공화국은 연방 국가이다. (기본법 제 20조) 정부와 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은 기본법과 대부분 국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권리를 포함한 정부 시스템은 대략 입법 및 행정 능력에 관한 책임 분야의 복잡한 집합을 수반으로 한다. 그리고 제 30조는 국가가 기본법에 의해 국가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기본 규칙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규제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더 구체적인 입법 책임의 변화에 입법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정부의 광범위한 입법에 있다. 정부의 병행능력은 민법 절차의 법칙 및 경제 업무 법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주민등록 등 숫자의 기본적 법적 행정체제는 연방 법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국가는 관리 층의 가장 중요한 지역과 지역 수주에 행정 공동체를 설립하였고 독일에 13,000개의 공동체가 있다. 국가 행정에 할당된 많은 책임들은 지방행정에 위임되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는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 전자 정부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은 기술에 따른 자치 권리를 가진다. 즉, 법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서 지역 사회의 모든 업무를 규제하는 입법 및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역 단위의 인적 자원 관리, 조직, 지역의 법률과 계획의 문제에 중대한 자치권이 있으며, 국가 당국의 감독은 지역 문제에 합법성에 국한되어 있지만 위임된 책임과 관련해서는 합리성으로 확장하지 않고 그 조직 체계의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복잡한 분야라는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법이다. 이 절차는 부분적으로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하나의 규제 영역에서 적용되는 특정 법률 또는 법적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일반 대중 및 각종 행정 기관의 형식적인 요구 사항에서 특히 많은 조항에 포함된다. 각각의 정부 또는 주의 행정 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종 관리 작업, 행정법에 의한 지배, 행정 행위와 협약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의 적용 범위는 해당 역할에 대한 권위와 권위에 의해 행사될 때 그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2) 조정과 협력의 의미**

독일 행정 시스템의 단편화는 때로 협동 조합이라는 협력에 대한 복잡한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 법칙에 따라 여러 측면에 얽혀 있다.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이 설립되기 전 장관급 위원회의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협력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들이 제도화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였다. 협력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법적 구속을 할 수도 있다. 협력의 가장 가까운 형태는 공공기관의 기초이다. 유능한 상태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할 상태에서 책임과 동일한 헌법을 제기하고 그들의 능력에 손실이 있지만 협력의 헌법 한계까지 명확하게 되어있다.

**3) 독일의 전자 정부 전략**

독일의 전자 정부 전략은 정부 시스템의 결과로서 더 균일한 전자 정부 전략은 없다. 이 전략은 전자 정부의 일반적인 개념에 맞춰 부분적으로 비공식적 정치 네트워크에 의해 조정되는 전자 정부의 발전, 그리고 중심기관의 잡동사니까지 추가할 수 있다. 공공행정의 IT 보급률의 수준이 높지만 뒤쳐지는 일부 작은 지방의 행정기관도 있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곳만큼 전자 정부에 대해 노력하는 패러다임, 또는 전반적인 형태와 목표는 동일하다. 전자 서비스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더 투명하고, 더 고객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시간을 단일 지점에서 일년 365일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은 자칫 민주주의에 대한 자극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전자 정부의 참여 요소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시민의 개념에 의해 보장된다.

**4) 정부 차원: 주(州)의 지지에서**

정부는 전자 법적 업무의 모든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법적 체제를 제공하였고, 1997년 초부터 전자 서명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고 그들은 전자상거래 정부와 전자서명에 대해 세계에서 첫 번째 법적 체제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공급업체가 시장을 진입하기 전에 관련 기술 복잡성, 수요와 법적 개발에 대한 몇 가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상 결여로 인해 2001년까지만 시행되었다. 법의 첫 번째 수정 조항의 유럽 전자 서명지침은 2001년 통과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전자 서명의 성공을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멀티미디어의 개발 및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미디어 동료 사업을 1998년 시작하였고,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전자 서명을 이용하였다. 전자 서명의 사용을 포함하여 일반 및 온라인 거래의 전자 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획은 2004년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의 보급을 목표로 하여 미디어 동료 사업에 양도해 성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정 절차를 추가하기 위해 주요 장애물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의 필요로 인해 연방 정부는 민법을 개정하여 연방의 공동 초안으로 시작하여 전자 통신에 법률 체제를 적응시켜 행정 절차 행위의 개정과 지금까지의 정부 행정 절차 법에 의해 일부 주들의 행정 절차가 수정되었고 나머지 주도 곧 이 방식에 따를 것이며, 정부의 공동접근 방식은 정부 행정절차법의 일지를 보존하게 된다.

**5) 주(州) 입장: 포괄적인 전략을 향한 첫 걸음**

정부 수준에서 많은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지만 다수 국가들이 많든 적든 종합적인 전자정부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은 각종 분권화의 주도권을 편집하려는 경향, 지침 및 원칙, 행정개혁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링크를 정부가 정의하여 자세한 일정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와 해당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바바리 안 정부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접근 및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효율적이고 균일한 행정절차를 정의하고 전자 정부 구현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였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적절한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달되며, 표준화되고 균일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상호 운용을 보장하고 전자 지불과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구성 요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역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자치단체와 국가단체의 협정을 체결하고 적절한 관할 기간에 사용이 가능한 모든 전자 양식을 용이하게 찾는 중앙 전자 표지판을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차원의 디렉터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상생상황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멀티 채널 접근, 생활 서비스와 연계시켜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유사한 기능을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연계하는 것을 포함하여 작업 흐름을 초기에 재설계하고 전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탐색을 하는데 여기에 문서관리시스템, 투명도,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에 의해 지원되는 레코드 전략과 구현은 시민의 요구에 대해 영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 기업간의 온라인 서비스인 BOS는 전자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를 통합하는 절차를 구현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IT 문제에 있어 다양한 기관에 대해 중앙 집중화된 지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자 정부 전략에 통합되었고, BOS는 시작 정보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기관을 위한 많은 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지역: 현상과 접근 방법의 다양한 이질성**

다양한 지역의 혁신적인 잠재력 때문에 현 상태는 전자 정부와 접근 방식의 큰 다양성에 대한 진보와 관련된 강한 이질성이 특징이다. 일부 집계된 데이터는 현재 상황을 전해줄 수 있다. 5,000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모든 시정 촌 및 도시들 중 2000년 디푸로 조회한 지방 정부의 65%가 이미 구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정부에서 2.5%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요 서비스의 핵심 그룹에 집중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 외에 그것은 주민, 각종 등록, 전자조달, 자동차 면허, 건축 허가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문의와 다양한 문화 서비스의 등록을 포함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기에 관한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한 자료, 여전히 행방 불명한 법률 개정안, 불충분한 관리 맞춤형 기술 해결 및 누락된 표준화 부족은 가장 불만 상황입니다.

**7) (전자정부) 체계와 협력 및 조정에 대한 접근 방식**

1992년 KoopA ADV는 아래에서 취급될 모든 관리층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해 말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공행정과 상호 정보 협력 기관 간의 통신에서 증가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강화된다. 표준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술적 및 조직의 표준화가 지원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80%는 광범위한 표준 및 연구 평론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개선할 수 있는 협력의 필요성에 중점 배치를 하고 싶어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개발을 조정하고 옵션제공을 위한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기구와 지배적인 조직의 체계를 구현하고 의사결정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정치인들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았다.

**8) 일반적인 문제와 협력 모드**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보안 조치의 배포를 지원하는 등 홍보활동 등의 문제에 적용된다. 공동작업은 유연하고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 정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관찰할 수 없다. 제한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더 복잡한 문제는 임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실무그룹 등의 지속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미 행정 절차 행위에 대해 모든 개정을 담당했던 작업그룹이 존재했었다. 전문가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한 ‘병목 현상’ 등의 전자 서명과 전자 서명의 상호 운용성의 분포 특성, 협력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게 중요한 다른 분야에서 작동하게 된다. 더 적절한 작업 그룹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전자 서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 정부가 이러한 점에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응용 프로그램은 전자 지불에서 보관 문서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설명된 모든 예제들을 포함하고 정부 전략의 대부분은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협력하는 방법과 자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으나 뚜렷이 드러나 있다. 특정관리 절차는 표준화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영역으로 물론 하나의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9) 국가 및 지방 행정 기관의 협력**

모든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특정 법률체계가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방 자치의 한계를 정의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을 기반으로 한다. 주 정부 및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체 사이의 협약은 가장 눈에 띄는 예이다. 물론 전자 통신의 특성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도 주 정부는 지방 정부에 위임한 책임의 실행에 관해 지침을 재정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힘은 조직 문제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전히 특정 역량의 실행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들은 최고 중요한 기준으로 상호 절단 문제를 사용할 수는 없다. 국가 기초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눈에 띄는 예로 등록 사무소를 찾을 수 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자 통신 거주를 위한 새로운 장소가 등록 사무소뿐만 아니라 이 등록 사무소에 거주한 오래된 장소에 있는 IT시스템이 실현될 것이다. 다양한 등록 사무소는 상호 운용되어야 하며 등록에 관한 법은 주민이 더 이상 자신의 옛 거주지의 등록 사무소에 통보가 되지 않도록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20개 이상의 서로 다른 IT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0) 연방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

독일 연방 정부 시스템 관리의 강력한 지방 분권이 특징이며 이 법률의 분산 실행이 차례로 그 지방의 지역 특성을 훨씬 잘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얘로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IT세계는 다양한 공공행정의 조직이 전통적인 관리에 대해 훨씬 더 상호 의존적이 되는 규모의 경제와 상호 연결의 세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메타 수준에서 행정 협력의 메커니즘으로 한다. 헌법 재판소는 반드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의 사용과 참조에 대한 상호 배려의 원칙을 개발했다. 공정한 절차를 규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작업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관할 기관과 협력하고 자원하는 업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원리는 매우 모호한 원칙이며 협력할 의미가 발생한다는 조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보의 사용은 표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정부 차원의 일반적인 관할권으로 제한되며 정보의 제공은 인센티브가 될 수는 없다.

**11) 전자정부의 통합에 대한 중요한 기관인 KoopA ADV**

헌법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동기화’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상호 정보와 일치 중심의 토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1970년에 설립되었고, IT 행정 사용의 첫 번째 물결에서 유래되었다. 행정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서 IT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은 공공행정 사이에서 논의되는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다. 순서에 따라 필요한 통합, 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뿐만 아니라 표준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ESTA는 일반 디렉터리와 암호화 및 공공 기관에서 공개 키 인프라 (PKI)의 통합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통신을 위한 공통 플랫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opA ADV에는 많은 연방 국가 기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정부는 TESTA에 연결되어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본 기준과 요구 사항의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발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대처하기로 되었다. 행정 능력을 강화하고 정치권력을 향상시켜 수행하여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개선된 제도를 설정하고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